

‘국정농단의 처음과 끝’ 최순실, 85세 돼야 수감 끝

안 전 수석 수첩 증거능력으로 인정
박 전 대통령 판결에도 영향력 줄 듯

최순실 씨의 유죄 판단 근거가 된 ‘안중범 수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하고 안중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핸드백 2개 몰수,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 수첩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봤다.

수첩에는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일러줬다는 기업 총수와와의 단독 면담 내용이 적혀있으므로, 간접사실에 해당하는 정황증거라는 설명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같은 재판부가 진행하는 만큼, 안 전 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은 박 전 대통령 선고에도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 지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하는 과정에서 안 전 수석이 다수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움직인 정황은 그의 업무수첩에 나와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제기부터 1심 선고까지

- 2016년
 - 10월 24일 JTBC, 최순실 국정농단 개입 의혹 보도
 - 최씨 사용 추정 태블릿PC 공개
 - 10월 27일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설치
 - 10월 30일 최순실, 독일서 한국 귀국
 - 11월 3일 검찰, 최순실 구속
 - 12월 9일 국회,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 현재 탄핵소추결정 접수
 - 박영수 특검팀, 공식 수사 시작
- 2017년
 - 1월 5일 최순실, 안중범 정호성 정시 공판 시작
 - 특검, 최순실 '삼성뇌물', '학사비리' 등 추가 기소
 - 3월 10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 5월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신동빈 정시 공판 시작
 -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건 병합 심리 결정
 - 최순실 및 정유라, 덴마크서 한국 강제송환
 - 6월 23일 최순실 '학사비리' 재판 1심서 징역 3년 선고
 - 10월 13일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
 - 11월 14일 최순실 '학사비리' 재판 2심서 징역 3년 선고
 - 12월 6일 정시호 '삼성후원' 강요 재판 1심서 징역 2년 6개월, 김종직 징역 3년 선고
 - 12월 14일 검찰·특검, 최순실 '재단 강제 모금, 뇌물 등' 혐의로 징역 25년·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 구형
 - 안중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로 받은 가방 2점과 추징금 4천여만원 구형,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
- 2018년
 - 2월 13일 법원, '국정농단' 관련 최순실 등 1심 선고 공판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이 개입한 미르·K재단 설립 주체를 청와대라고 판단했다. 두 재단에 대한 대기업의 출연금 지급을 최씨와 공모한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결과로 본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회원사들은 재단 설립을 서두를 이유가 없었음에도 청

와대가 4차례 회의를 열어 재단 설립을 독려하고, 전경련에 재단 출연 기업 명단을 건넨 점이 판단 근거였다. 재판부는 기업들이 '대통령 관심사항'이라는 안 전 수석의 말에 하루이틀만에 출연을 결정하고, 설립 이후 운영 내용에 관심이 없던 점도 문제삼았다.

안중범 수첩에는 재단 설립과 운영, 관련 증거 인멸 정황이 담겨있다. 지난해 1월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2016년 10월 12일자 'VIP 면담, 각종 의혹 제기 문제, TV조선·한겨레·국감, 사업 관련 청와대 주도한 게 아니라 참여한 것으로' '기업 자발적으로 한 것이고 청와대 요구 아니다. BH X' 등이 적혀있었다. 검찰은 해당 기록이 재단 출연 강요 관련 증거인멸을 위한 청와대 회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수첩에 적힌 인물들이 K스포츠재단의 주요 업무를 봤다는 재단 관계자의 증언도 나왔다.

이날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이 전경련에 재단 설립을 독려하고, 최씨가 재단 설립 이후 '회장님'으로 불리며 사업 보고를 받은 점 등을 볼 때 두 사람 모두 직권남용 부분 유죄라고 판단했다.

최씨가 지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부품회사 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을 박 전 대통령에 부탁했다는 직권남용 강요 부분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해당 회사가 납품하는 플라스틱 현대차 구매량이 신중을 이유가 없는 부분임에도, 안 전 수석의 요구를 받은 현대차가 불이익을 우려해 납품 계약을 맺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이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납품을 부탁한 사정을 명확히 알지 못했다더라, 박 전 대통령이 해당 회사를 유독 챙긴 점을 볼 때 누군가의 부탁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했을 것이라며 최씨와 함께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광고사 플레이그라운드와 현대차 광고 발주 역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강요한 것으로 봤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을 통해 안 전 수석에게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수주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기존 발주사가 있던 현대차가 불이익을 우려해 발주에 응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통령은 민간회사에 특정 광고 발주를 진행시킬 일반적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 모두 현대차 광고 직권남용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상상적경합 관계가 있는 강요는 유죄여서 따로 무죄 선고하지는 않았다.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점에 대해서도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사업 계획안대로 스위스 회사 누슬리가 체육시설을 지을 경우, 최씨 회사인 더블루K가 공사금액 5%를 받게 돼 자동으로 이익을 보는 구조인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하남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최씨의 요청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지원을 요청했으므로 신 회장과 최씨,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반면 재판부는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병준 기자 joker@metroseoul.co.kr

여야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체제 전환 본격화

여야가 6·1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본격적인 지방선거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지도부를 개편하는 등 지방선거 준비에 시동을 걸었고, 야당은 민심잡기 행보의 보폭을 넓히는 동시에 '후보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박범계·박남춘·이재호·김우남 등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선거 출마자는 선거 120일전(13일)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당규에 따른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민주당은 집권 여당 2기 지도부를 새롭게 구성하고 지방선거 승리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은 공석이 된 최고위원 4석 중 충청, 서울·제주권역 최고위원은 14일 최고위원회에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기·인천, 호남권역 최고위원은 권역별 협의가 이뤄진 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충청권역 최고위원에는 충남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완주 수석대변인이, 서울·제주권역에는 안규백 서울시장위원장이 맡아 각각 충청권과 서울·제주권의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안규백 서울시장위원장은 최고위원이 되자마자 당내 박원순 서울시장, 박영선·우상호·민병두·전현희 의원, 정봉주 전 의원 등이 몰린 서울시장 선거의 경선과 승리를 이뤄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민주당은 설 명절 민생 행보를 이어가며 동시에 새로운 지도부 체제를 중심으로 한 지방선거 전략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민심잡기 행보에 보폭을 넓히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전날 부산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에는 '보수 심장' 대구를 찾았다.

앞서 홍 대표는 전국 지방선회 신년회를 열면서 '보수의 바람'을 일으키고, 특히 영남권에서는 "절대 밀리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때까지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지방 민생 행보 일정에 집중하며, 지지율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후보 찾기'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지지율을 회복하고,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에 적절한 후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뒷받'인 영남권을 제외하고는 후보자 찾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다. 특히 지방선거 승리의 바로미터인 서울시장 자리도 여러 인사들에게 제안됐지만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원 기자

文대통령 “설 명절 안전 꼼꼼하게 점검해달라”

취임 후 첫 화상 국무회의 주재 반부패 대책 강도 높은 시행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행복해야 할 명절에 사건사고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통, 식품 위생, 재난대비, 응급의료 등 모든 안전 분야에 걸쳐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비해달라”고 각 부처에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족의 큰 명절인 설이 다가온 만큼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게 정부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꼼꼼하고 세심하게 점검해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납품대금 결제 등 경영상 어려움과 결식아동 등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등 올림픽 분위기로 자칫 소외되거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세심히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여성전문금융업법 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와 세종청사를 잇는 첫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51건,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2017년 반부패 관련 평가결과 종합분석' 보고도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또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등 공공기관 청렴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 채용비리 전수조사 등 일련의 반부패 노력으로 공직사회의 청렴 문화가 점차 정상궤도를 찾아가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전임 정부의 부패에 대한 국민의 높은 반감과 엄중한 심판 속에서 출범한 정부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의 청렴도에서 전임 정부와 확연히 차별화되는 획기적인 진전을 보여주지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2017년은 중간에 정권이 교체됐기에 정권교체 전후의 청렴도 비교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올해는 확실한 차별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연중내내 반부패 대책을 강도 높게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위로부터 '반부패 관련 평가결과 종합분석'을 보고받고는 “청렴도를 조사한 국제기구들의 순위발표를 보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과 나아가 기업까지 포함한다”면서 “민간기업까지 청렴도 조사를 평가해보는 일을 검토해 달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국민의당-바른정당 합당수입기관 합동회의의 김중로 의장(왼쪽 네번째)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바른정당 양당 수입기관 합동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창당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출범...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

통합신당인 바른미래당이 13일 공식 출범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날 국회에서 통합 전당대회적인 수입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합당 안건을 의결했으며, 일산 킨텍스에서 출범대회를 열고 이를 추진해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초대 공동대표에는 박주선 국회의장과 유승민

전 바른정당 대표가 선임됐으며,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고 2선으로 물러났다. 소속 의원은 국민의당 21석, 바른정당 9석을 합쳐 30석으로 원내 제3당으로 출발하게 됐다.

유 대표는 수입기관 합동회의 인사말을 통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바로 사

퇴하겠다. 그 이후 최단시간 내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바란다”며 “당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 대표는 바른미래당의 대표직을 시사하면서, 지방선거가 끝나면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은 창당과 동시에 유 대표와 박 대표의 진두지휘 하에 지방선거 모드로 본격적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지도체제 인선도 마무리 지었다.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동철 의원이, 정책위의장은 바른정당 출신 지상욱 의원이 맡기로 했다.

최고위원에는 정운천 의원(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바른정당), 김중로 의원(국민의당), 권은희 의원(국민의당) 등 4명이 선임됐으며, 사무총장은 이태규 의원(국민의당), 사무부총장은 김성동 전 의원(바른정당)이 선출됐다.

정강·정책도 마련됐다. '합리적 중도'·'합리적 진보' 등 표현을 두고 합당 직전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이들은 이념적 표현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창원 기자 mediaeco@